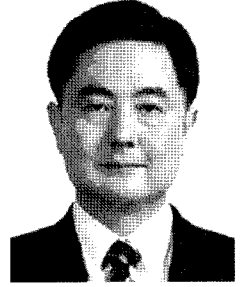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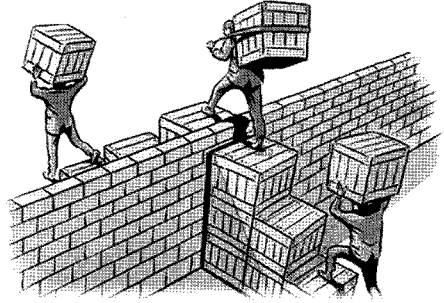
최근의 세계적 경제 위기와 관련한 기술규제 동향



이 은 호
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과장

들어가기

2007년 중반부터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며 시작된 세계적 경제위기 우려는 2008년 늦가을에 들어서면서 현실화되었다. 전세계의 유명한 경제학자들이나 언론에서도 1930년대의 대공황시대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보아 현재의 상황이 심각한 것에는 이론이 없는 것 같고, 또한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데에도 1930년대의 경험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1930년대에 주요 선진국들이 앞장서서 보호무역주의를 택한 전례가 금번에도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각국의 정상들과 국제기구에서는 한결같이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국가들이 다양한 종류의 보호무역 조치들을 채택하였거나 도입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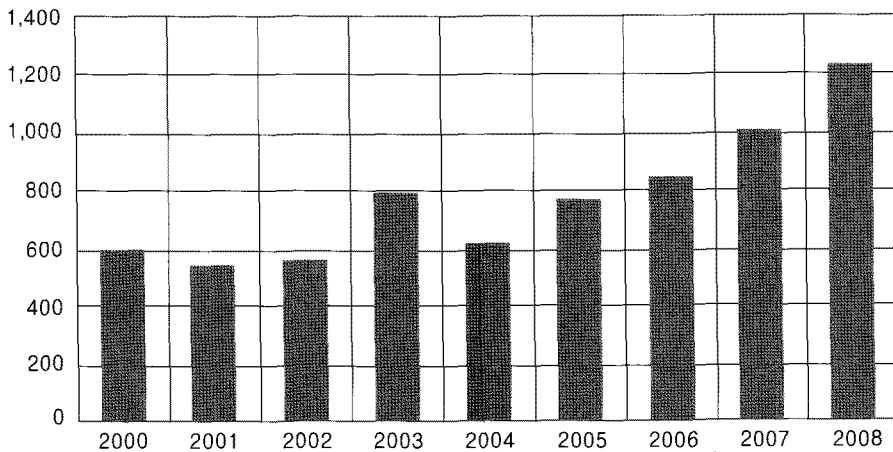


기술규제는 다양한 비관세 무역장벽 중 하나로서, 보호무역조치 중 하나로 간주된다. 자국 국민의 안전, 보건, 위생수준 및 환경 등을 보호하려는 명분에 근거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자국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해 똑같은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도 자체로서는 불공정한 무역장벽이라고 쉽게 비

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선진국들이 도입하기가 쉽고, 이들의 앞선 기술수준에 못미치는 개도국들의 제품들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인 지금, 기술규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일까?

최근 기술규제의 증가 추세 및 내용 분석

우선 WTO의 무역상기술장벽위원회(TBT위원회)가 회원국들로부터 기술규제의 제정/개정 정보를 받아 발표하는 TBT통보문의 숫자를 보면 기술규제의 수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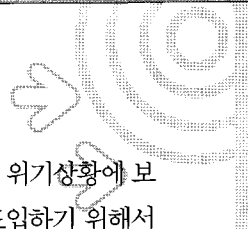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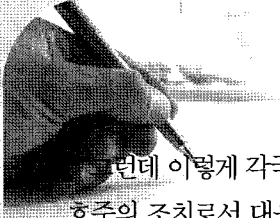


〈2000년 이후 TBT통보문 증가 추세〉

특히 2009년에 들어서서는 전년 동기에 비해 TBT통보문이 급증하고 있는데, 2009년 1/4분기에 발행된 TBT통보문은 411건으로서 2008년 1/4분기의 316건에 비해 27%이상 증가하였다.

국 가	중 국	사우디	카타르	바레인	이스라엘	미 국	기 타	합 계
통보건수	60건	44건	43건	39건	27건	26건	172건	41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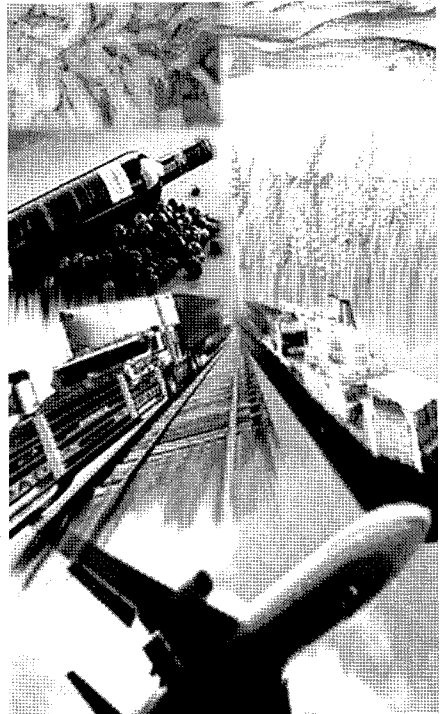
〈2009년 1/4분기 국가별 TBT 통보건수〉



런데 이렇게 각국이 기술규제를 확대 내지는 강화해나가는 것이 모두 최근의 경제적 위기상황에 보호주의 조치로서 대응하는 것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기술규제를 새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내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기술규제를 집행하기 위한 기술적 하부구조(표준 등 기술기준 정비와 시험설비/인력 확보 등)를 제도 시행에 앞서 구축해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을 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므로 세계적 경제위기라는 상황이 오자마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바로 기술규제를 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최근 늘어나는 기술규제 중 특히 선진국들에서의 기술규제들은 그간 차근차근 진행해온 장기적 기술규제 계획에 따른 결과물이 마침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선진국들의 기술규제 방향은 EU가 지난 수년간 주도해온 것과 같은 환경보호 및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거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규제가 하나의 큰 흐름을 이루고 있으며, 다른 한쪽으로는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산 불량상품으로 인해 야기된 국민의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히 미국 등에서 기존 기술규제를 확대 강화 하는 것이 큰 흐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최근 많은 개도국들이 기술규제를 강화해나가고 있는 것은 반드시 장기적 계획에 의한 결과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물론 신흥시장국들이 최근의 고속 성장을 통해 소비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그동안 관심을 못 두던 안전, 환경, 보건 등에서 기술규제의 신규도입이 필요하게 된 점도 있고, 지난 수십년간 국가의 기술규제기능 중 상당부분을 외국기관들의 서비스에 의존해온 국가들이 이제는 시험 및 인증에 대한 자체기반을 확충하고 스스로 기술규제 제도를 집행하기 시작하였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 적용 품목이 지나칠 정도로 광범위하고, 시행하려는 인증 제도 또한 가장 강한 수준(제품시험, 품질시스템 확인 및 사후 관리가 모두 포함된)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개도국의 제한된 시험인증 기반만으로 계획된 목표를 실제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따라서 인증제도 도입에 또 하나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지난 1년간 기술표준원이 직접 대응한 외국의 기술규제 사례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여기에서 선진국의 기술규제와 개

도국의 조치들에서 차별성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사우디 등에서 모든 공산품에 대한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자체 시험검사 기반을 구축한 후 이를 활용하려는 정책을 시작하였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의 기술규제는 장기적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과 중국산 불량제품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개도국들에서 기술규제가 광범위하게 도입되는 것은 '90년대 초반에 러시아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후 급증하는 수입 공산품에 대응하기 위해 강제검사제도를 전면 도입했던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현안발생	국 가	기술규제 내용	기술표준원의 대응 및 활동 결과
'08.3	노르웨이	소비제품의 18개 유해물질 사용금지	• WTO/TBT 위원회('08.3, '08.7)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DEHP 제외
'08.6	인도 네시아	아연도금강관에 대한 SNI 강제인증	• 인니정부, WTO/TBT 위원회('08.7)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철회
'08.7	사우디	모든 수입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 첨부	• MoU 체결('08.6), 국내 16개 기관을 사우디 적합성 인증기관으로 지정('08.12)
'08.7	중 국	13개 정보보안제품에 대한 강제인증(CCC)	• 미국·일본과 공조, 중국은 강제인증 시행보류 발표('08.11)
'08.11	미 국	12세이하 어린이용품 안전인증을 도입 적합성인증을 의무화	• 대미수출업체 대상 설명회('08.11) • KOLAS 시험기관 지정('08.11)
'08.12	인 도	17개 철강재/철강제품에 대한 BIS 강제인증	• 일본, EU와 공조하여 대응, 1년 시행 연기('09.2)
'08.12	E U	타이어 소음제한 인증마크 부착	• EU측에 시행시기 변경 요청 • 한-EU 공동위에서 논의('09.2)
'09.2	인도 네시아	열연재, 갈바륨 등 철강제품에 대한 SNI 강제인증	• 인니 표준청(BSN) 방문 및 협의('09.3) • WTO/TBT위원회에서 문제제기 및 시행연기요청('09.3)
'09.2	에콰도르	공산품(타이어, 철강,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시험성적서와 적합성 인증서 첨부	• 미국과 공조하여 대응, 에콰도르측이 180일 시행연기('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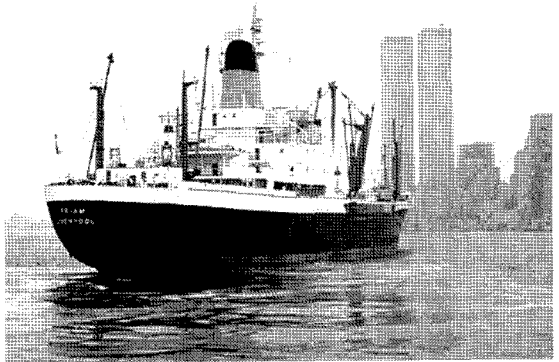
〈 최근 1년간 TBT 현안 대응내용 〉

세계적 분업체제에서 기술규제의 효과

그러나 앞으로 우려해야 할 바는 기술규제의 확산 내지는 강화가 모두 겹쳐질 경우 우리의 수출 및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26일 영국의 The Economist紙는 "Globalisation and trade - The



“nuts and bolts come apart”라는 기사를 통해, 세계적으로 생산거점이 다각화되고 국제적 분업체제가 강화된 것으로 인해 현재 각국별로 취하고 있는 관세 인상 및 각종 비관세 장벽조치들이 국제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同 紙는 예전과 달리 한 제품을 최종적으로 만드는데 부품이나 소재가 국경을 56번씩 넘나들어야 하는 현대적 생산시스템의 경우 국가별로는 조금씩 취하는 조치들이라도 최종 제품에는 이들이 모두 곱해진 효과를 받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리를 기술규제에 적용하여 검토



를 해보면, 우선 통신기기에 대한 미국-EU간 기술규제가 관세를 6%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다는 John Wilson의 '96년도 분석결과를 적용하고, IT제품이 동남아에서 6개국간 역내 분업을 통해 완성된다고 가정하며, 이 6개국들이 모두 기술규제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최종적으로 기업에 떨어지는 부담은 1.06의 6승, 즉 1.419가 되며, 기존 체제에서보다 41.9%의 비용부담을 추가적으로 해야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참고로, The Economist지의 기사에서와 비슷한 논리를 기술규제분야에 적용한 사례는 '90년대 말에 미국 인텔 및 HP 등이 중심이 된 다국적 IT기업들이 APEC의 표준적합성소위원회(SCSC)에서 제안했던 사업에서 찾을 수 있는데, 당시 기업들의 주장은 레이저 프린터를 하나 만드는데 있어 부품 및 소재들이 동남아 국가들의 국경을 6-7번씩 넘어야 하는바, 국가별로 운영하는 기술규제들이 모두 겹치면 큰 부담이 되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서 IT제품에 대해서 APEC회원국들의 강제검사제도를 모두 공급자 적합성 선언제도(SDoC)로 전환하자는 것이었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당시 APEC회원국 대표들이 기업들의 이러한 제안에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것 같지는 않다.

의도가 원래 무엇이었던지에 상관없이 최근 기술규제가 세계적으로 확대되거나 강화되는 추세가 세계 경제 위기 상황과 겹쳐져서 나타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세계적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각국의 정치인들이 가장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보호 무역조치인 관세 인상이 WTO 등 국제적 약속 및 '30년대의 기억'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각종 비관세 조치들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안전, 환경, 위생 등 외국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명분을 가진 조치가 기술규제라는 점을 모든 정부들이 인식하고 있기에 기술규제는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럴 경우 이미 생산거점을 전세계에 설치하여 국제 분업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의 핵심 기업들은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보인다.

향후 활동에 대한 제언

이러한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특정 국가의 신규 또는 강화된 기술규제에 대해 그 나라와의 교역 품목과 규모를 파악한 후 이에 따라 대응하던 방식에서 발전하여, 전 세계의 기술규제 신설 내지는 강화 움직임에 총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조치에 대해 집단적 대응이 논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술규제의 강화 내지는 확대 동향에 대해서도 여러 국가들이 힘을 합쳐 대응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은 선진국들이나 무역규모가 큰 국가들부터 선도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최근 WTO의 TBT위원회에서 몇몇 국가들이 공조하여 여타 회원국의 기술규제시행을 연기토록 하거나 적용범위를 조정토록 유도한 것은 좋은 협력사례라고 생각된다. 또한 불량 공산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국, EU가 중국과 협력하여 운영 중인 제품안전 협의체 또한 기술규제를 특별히 강화하지 않으면서 국민에 대한 안전보호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몇몇 성공사례들이 세계적으로 호응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도 선도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는바, 예를 들어 기술규제에서도 Stand-Still을 선언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신흥경제권 국가들이 도입하려 하는 공산품에 대한 강제검사제도가 조기에 좋은 제도로서 정착하여 비효율적인 Red-Tape로 변질될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인력교육 및 경험 이전사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별로 운영하는 기술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중복 시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의 보급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국가간 및 기관간 상호인정 협약을 적극 장려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전술한 TBT대응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국의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수출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 및 방법을 활용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능력만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WTO-TBT위원회에서 여타 국가들과 공조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우리 공관을 활용한 직접적인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수출 대상국가의 규제당국과 협력하여 국내 시험/인증기관들이 그 나라의 기준에 맞추어 시험/인증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는 외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현지 기업과 같은 시간에 입수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입수된 정보의 효과적인 분석과 대응방안을 위해 국내 대응조직을 기업 중심으로 보강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에 대해 전 세계적인 공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활동도 전개해나가려 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얻어지게 되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제고되는 한편 세계 경제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